
2015년 세법개정 중견기업계 10대 건의

2015. 5. 18

건의배경

R&D활성화,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한 세계개편안 건의

- **(중견기업 성장동력 위축)** 중견기업수는 ('12) 3,436개 → ('13) 3,846개로 전년대비 11.9% 증가하고, 국민경제 기여도가 상승하는 등 기업 수만 보면 안정적인 증가세이나,
 - * 전체 기업 중 중견기업 비중: ('12) 0.10% → ('13) 0.12% (중소기업청, '2014 중견기업 통계')
 - 최근 R&D집약도와 평균매출액은 감소하여 개별 중견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우려

<표 1> 연도별 중견기업 R&D집약도와 매출액 추이

구분	'09	'10	'11	'12	'13
R&D 집약도(%)	1.42	0.98	1.13	1.08	0.88
평균매출액(억원)	2,560	1,866	1,682	1,844	1,709

주: R&D 집약도는 매출액대비 R&D 투자액
 자료: 중소기업청, '2014 중견기업 통계'

- 또한, 중견기업에 64.5%가 신규채용이 어렵고 10개 중 8개 기업이 인력이탈을 겪고 있는 등 인력난도 상당
- *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'중견기업 인력 애로요인 심층 조사분석 연구', 2015.1
- 특히,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('12) 50개 → ('13) 76개로 증가하였고, 유예단계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도 여전히 존재

<표 2> 연도별 중견기업 → 중소기업 회귀현황

'05→'06	'06→'07	'07→'08	'08→'09	'09→'10	'10→'11	'11→'12	'12→'13
72	51	44	53	58	91	50	76

자료: 중소기업청, '2014 중견기업 통계'

- * 중견기업 8.9%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한 적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

‘조세혜택(63.5%)’으로 조사(중소기업청, ‘2014 중견기업 현황’)

- 단순히 규모기준으로 조세특례를 단절·축소하기보다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했는지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
- (매출액대비 세부담은 중견기업이 가장 커)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매출액대비 법인세 비중은 중소기업(0.36%), 중견(1.27%), 대기업(1.08%)으로 중견기업이 가장 높음 (중소기업청, ‘2014 중견기업 통계’)
- 중견기업 위상*과 비교하면 전체대비 법인세 납부비중(24.0%)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
- * 전체대비 중견기업수 비중(0.12%), 수출비중(15.7%), 고용비중(9.7%), 매출액비중(15.4%)
-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세제개편 필요

□ 건의요약

	구 분	현 행	중견련 건의	
R & D	1	연구·인력개발비 (신성장·원천기술) 조특법 제10조제1항1호, 2호	중소 30%, 일반 20% (15.12.31까지)	중소 30%, 중견 25% , 일반 20% (17.12.31까지)
	2	기술이전 과세특례 조특법 제12조제1항	1년만 한시적으로 중견기업까지 확대 (15.12.31까지)	일몰연장 (17.12.31까지)
	3	연구요원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	중소·벤처기업 연구요원 연구보조비 비과세(월20만원 이내)	중견기업까지 확대
고 용	4	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30조	중소기업만 지원 (15.12.31까지)	일몰연장 및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편입된 지 (유예기간 경과후)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까지 확대 (17.12.31 까지)
	5	장기재직자 지원 조특법 신설	신설	중소·중견기업 장기재직자 지원 신설
	6	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	중소기업만 지원 (15.12.31까지)	일몰연장 및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편입된 지 (유예기간 경과후)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까지 확대 (17.12.31 까지)
설비투자	7	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, 4항	1년만 한시적으로 중견기업까지 확대 (15.12.31까지)	일몰연장 (17.12.31까지)
기 타	8	최저한세율 조특법 제132조	중소, 중견(1~5년차), 이 외 기업 과세표준별로 세율 차등	일반기업을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별하여 차등
	9	기업소득환류세제 법인세법 제56조	중견·대기업 과세기준을 동일	중견·대기업 과세기준을 차등
	10	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, 지방세기본법 제110조	법인에 대한 공제감면 일괄폐지 국세와는 별도로 세무조사 가능	주요세액공제·감면대상을 법인까지 확대 정부-지자체의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 지양

목 차

1.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신성장·원천기술)	1
2. 기술이전 과세특례	4
3. 연구요원 소득세 비과세	6
4. 취업자 소득세 감면	7
5. 중소·중견기업 장기재직자 지원	9
6.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11
7.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	14
8. 최저한세율	16
9. 기업소득환류세제	18
10. 법인지방소득세	21

1.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(신성장·원천기술) 중견기업과 대기업 차등해야

[조특법 제10조 제1항 1호, 2호]

중견기업계 건의사항

○ 일몰연장과 중견기업 구간 신설

(현행) 중소기업 30%, 일반 20% ('15.12.31까지) → (건의) 중소기업 30%, 중견 25%, 일반 20% ('17.12.31까지)

1. 현황

-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 30%, 일반기업 20% 공제 ('15.12.31까지)

* 신성장동력: LED, 그린수송시스템, 로봇응용,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11개 분야

** 원천기술: 금속, 생산기반, 섬유, 에너지효율향상, 온실가스, 자원 등 18개 분야

2. 문제점

① 중견기업 R&D 여력이 계속 약화

- 중견기업 R&D 집약도는 ('11) 1.13% → ('12) 1.08% → ('13) 0.88%로 연속 감소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성장동력이 저하될 우려 (중소기업청, '2014 중견기업 통계')

- 영업이익률, 당기순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기업수익성 악화로 인해 R&D여력이 낮아진 것으로 보임

- 다만, 중견기업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R&D 분야는 신제품 개발 (49.4%)이 가장 많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잠재적인 투자 수요는 존재

* 중견기업 중점투자분야: 신제품 개발(49.4%), 기존제품개선(17.4%), 공정개선(17.1%)순으로 응답 (중소기업청, '2013 중견기업 애로요인 실태조사')

② 중소-중견-대기업간의 조세특례 형평성 확보가 필요

-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이 더 많은 조세혜택을 받는 점은 당연하나,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42.2%를 10대 대기업이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 (국회 본회의 회의록, 2013.1.1)

- 대기업이 차지하는 R&D 관련 조세지원 비중은 ('10) 59.4% → ('11) 61.1% → ('12) 62.8%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

* 중소기업연구원, '중소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현황 및 과제', 2014.4

-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제제도인 만큼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을 차별한다면 조세형평성 제고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

③ 공제방식간의 통일성 필요

- 현재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일반 R&D 당기분방식에만 중견기업 구간을 마련하였는데,
- 같은 법조항(조특법 제10조 제1항)임에도 신성장·원천기술, 일반 R&D 증가분 방식에는 여전히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일반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기업 혼란 야기

3. 건의사항

- 중견기업 구간 신설과 일몰연장
 - (현행) 중소 30%, 일반 20% ('15.12.31 까지) → (건의) 중소 30%, 중견 25%, 일반 20% ('17.12.31 까지)

4. 기대효과

- **(일자리 확대)** 중견기업은 대기업만큼 대규모로 R&D투자를 할 수 없으므로 좋은 인재를 채용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구조가 대부분인데,
 - * 한국중견기업연합회, ‘중견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간담회’, 2015.3
- 조세부담이 완화되어 중견기업이 투자를 확대한다면, 자연스럽게 인력채용도 증가할 것
- **(산업경쟁력 강화)**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, 엔화 약세, 경제 불안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,
 - 미래 성장원천을 확보하여 우리 산업의 질적인 부분을 제고하고, 중소·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술혁신형 전문기업으로 성장 가능

2. 기술이전 과세특례

1년만 한시적으로 중견기업까지 확대 → 일몰 연장

[조특법 제12조 제1항]

중견기업에 건의사항

- 일몰연장: '15.12.31까지 → '17.12.31까지

1. 현황

- 중소·중견기업이 특허권, 실용신안권,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등을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0% 세액 감면('15.12.31 까지)

2. 문제점

-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·이전을 지원하고자 '15.1.1부터 기술이전 소득 세액감면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으나 '15.12.31 일몰예정 이여서 일회성 정책이 될 우려
-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(조사기업: 1,545개)은 특허 30,766건, 상표 12,250건, 디자인 3,812건, 실용신안 3,255건이 누적되어 있고,
 - 중견제조기업의 76.2%가 지식재산권을 보유, 개수는 평균 33.2건 으로 잠재적인 기술이전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

* 중소기업청, '2014 중견기업 현황'

<표 3>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등록현황

(단위: 건, 개)

구분	전체				응답기업수
	특허	실용신안	디자인	상표	
제조업	25,560	2,790	3,305	6,613	774
비제조업	5,206	465	507	5,637	771
합 계	30,766	3,255	3,812	12,250	1,545

주: 중소기업청, '2014 중견기업 현황'

- 특히, 중견기업은 오너중심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핵심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한 기업이 다수
- 산·학·연 과학기술협력은 OECD(30개국) 중 2위인 반면, 기업 간 협력은 20위권에 답보상태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고, (미래부, '2014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결과')
- 우수기술이전은 중소·중견기업의 사업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기업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

3. 건의사항

- 일몰연장: '15.12.31까지 → '17.12.31까지

3.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요원 소득세 비과세 중견기업까지 대상 확대

[소득세법 제12조,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]

중견기업제 건의사항

- 중소기업만 대상 → 중견기업까지 확대

1. 현황

- 중소·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(활동비)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

2. 문제점

-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'전문기술인력 부족'으로 조사
 - * 기술개발시 애로사항(제조업): 전문기술인력부족(37.2%), R&D 세제혜택 감소(25.2%), 중견기업에 대한 R&D사업 부족(17.9%) 순으로 응답 (중소기업청, '2013 중견기업 애로요인 실태조사')
- 특히, 업력이 길어질수록 연구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증가
 - * 전문기술인력 부족 응답비율: 중견 진입이후 5년 미만(32.1%) → 5년 이상 ~ 10년 미만(35.4%) → 10년 이상(39.7%) (중소기업청, '2013 중견기업 애로요인 실태조사')
- 기업이 아닌 연구원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인 만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

3. 건의사항

- 중소기업만 지원 → 중견기업까지 확대

4. 취업자 소득세 감면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

[조특법 제30조 제1항]

중견기업계 건의사항

- 일몰연장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
(현행) 중소기업만 지원 ('15.12.31까지) → (건의)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까지 확대 ('17.12.31까지)

1. 현황

- 청년, 60세 이상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'12.1.1(60세 이상, 장애인은 '14.1.1)부터 '15.12.31까지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 50% 감면 ('15.12.31까지)

2. 문제점

-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(매출 1천억원 미만)의 고용애로는 유사
 - 매출 1천억원 미만 중견 제조업의 평균 대졸초임은 2,920만원으로 중소기업(2,580만원)*과 큰 차이가 없고, 구직자 희망연봉(3,000만원 이상)**과도 차이가 있어 신규채용이 어려움

*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'중견기업 인력 애로요인 심층 조사분석 연구', 2015.1

** 대한상공회의소, '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의사 및 불일치 실태조사', 2012.4

- 입사지원 경쟁률도 연구개발직(5.4:1), 생산직(7.4:1)으로 중소기업(6.0:1)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초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인력확보가 어려움

3. 건의사항

- 일몰연장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

- (현행) 중소기업만 지원 ('15.12.31까지) → (건의)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까지 확대 ('17.12.31까지)
- '초기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'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투자세액공제의 대상 기준인 '매출 3천억원'*이 아닌 중견기업 진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

* 연구·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,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, 생산성향상시설·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

4. 기대효과

- 적정수준의 소득세 감면은 중견기업 취업자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유발하고 유효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음
- 고용관련 세제확대를 통해 우수인재가 유입되면,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

※ (참고) 중견기업에 고용관련 조세특례를 확대하면 중소기업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박

-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구직자 수준, 일자리의 질 등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
- 중견기업까지 조세특례를 확대하면 '양질의 신규일자리 창출'로 이어지는 것이지 중소기업 취업희망자가 중견기업으로 이탈하는 등 중소기업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님
- 경력직 채용의 경우도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출신을 스카우트 하거나 선호

5.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지원 신설

[조특법 신설]

<중소·중견기업 인력문제 악순환>

신규 인력확보 어려움 → 기존직원들에 대한 업무부담 증가 → 이직유인 제공 → 인력이탈 지속

중견기업계 건의사항

중소기업과 일정수준 고용창출을 하는 중견기업에 근로중인 장기재직자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

1.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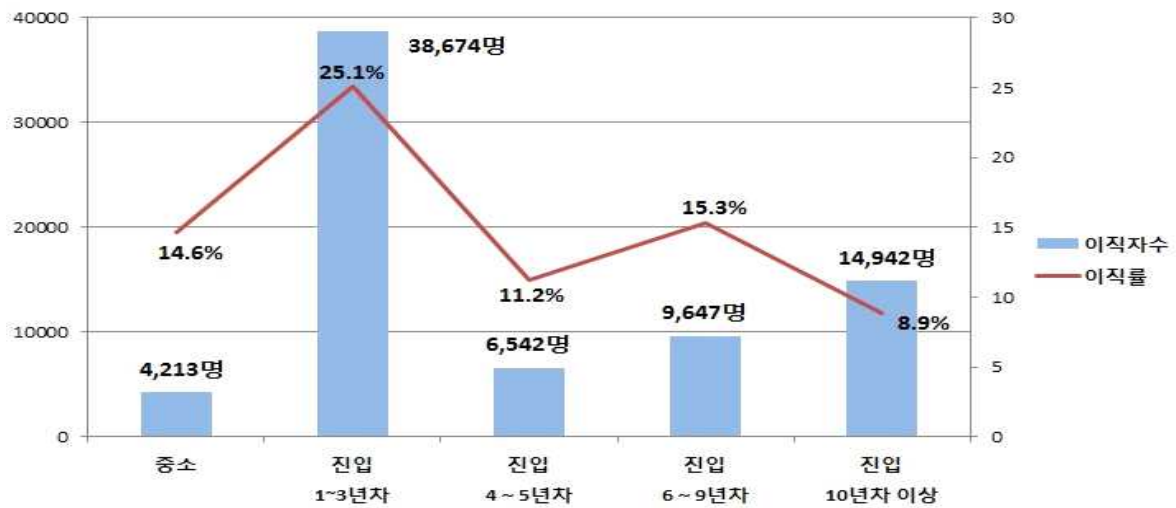
① 중견기업 10개 중 8개 기업이 인력이탈 애로

- 마케팅인력 이탈(82.6%)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가장 많고 연구개발직(71.7%), 생산직(67.2%)순으로 많음
(한국산업기술진흥원, '중견기업 인력 애로요인 심층 조사분석 연구', 2015.1)
- 세부직종별로 보면, 해외마케팅인력(81.2%)과 고급연구개발인력(68.3%)의 이탈이 심각한데,
- 고급연구개발인력 이탈이 있는 기업의 26.8%가 애로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

② 중견기업 1~3년차 기업(초기 중견)의 인력이탈이 가장 많아

- 성장단계별로 보면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(진입 1~3년차) 평균 이직률이 25.1%로 가장 높음

[그림 1] 2013년 중견기업 이직자 현황



출처: 중소기업청, '2014 중견기업 현황'

③ 성장단계에 따라 인력이탈 원인 달라, 맞춤형 정책이 필요

- 중견기업 진입연차가 짧을수록 '임금·복지 불만', 중견기업 진입 연차가 길어질수록 '대기업 스카우트'로 인한 인력이탈이 많음

* '임금·복지불만'을 이직원인 1순위로 응답한 비율: 중소기업(28.2%) → 진입 1~3년차 (21.9%) → 진입 4~5년차(24.6%) → 진입 6~9년차(17.4%) → 진입 10년차 이상(17.4%)
 '대기업 스카우트'를 이직원인 1순위로 응답한 비율: 중소기업(5.9%) → 진입 1~3년차 (8.1%) → 진입 4~5년차(10.9%) → 진입 6~9년차(12.4%) → 진입 10년차 이상(16.9%)

중견기업 A사 사례

저희는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. 연봉을 인상하고 복지를 개선해도 인력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. 월급은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, 직급을 상승시켜서 스카우트를 할 경우 이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. 회사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.

- 특히, 연구개발 장기프로젝트에 참여하는 R&D인력이 갑자기 퇴사를 하면 기업에게는 상당한 타격

2. 건의사항

- 중소기업과 일정수준 고용창출을 하는 중견기업에 근로중인 장기 재직자에 대해 지원 신설

6.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

[조특법 제30조의4 제1항]

중견기업제 건의사항

○ 일몰연장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

(현행) 중소기업만 지원 ('15.12.31까지) → (건의)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까지 확대 ('17.12.31까지)

1. 현황

-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더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('15.12.31까지)

* 청년(15세 이상 ~ 29세 이하): 고용증가인원 ×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 × 100%

** 청년 외: 고용증가인원 ×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 × 50%

2. 업계의견

① 중견기업 64.5%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
- **(신규인력채용)** 중견기업 초임은 평균 3,075만원이나 낮은 인지도로 인해 입사를 기피 (한국중견기업연합회, '2012년 중견기업 대졸 초임 연봉조사')

* 중견기업 신규인력 채용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: 대기업에 비해 낮은 인지도 (31.3%) 중소기업청, '2013 중견기업 애로요인 실태조사'

- **(인력이탈)** 중견기업 평균 근속연수는 7.2년이고, 이직률은 14%

* 이직원인: 임금·복지불만(22.3%), 중견기업 스카우트(15.0%), 대기업 스카우트(9.9%) 등
(중소기업청 '2014 중견기업 현황')

- 중소·중견기업 취업경력은 대기업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 인력이탈에 따른 고용불안이 존재

② 중견기업 고용에 대한 조세특례 미미

- 최근 정부는 연구개발, 투자, 가업승계 등 주요세제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한 반면, 고용관련 주요세제*는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어 제도간의 불균형 존재

* 조특법 제29조의2, 제29조의3, 제30조, 제30조의2, 제30조의3, 제30조의4

- '15년부터 시행중인 '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에 대한 세액공제'(조특법 제29조의3)에 경우도 중소기업에게만 해당되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안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

3. 건의사항

- 일몰연장 및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
 - (현행) 중소기업만 지원 ('15.12.31까지) → (건의)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까지 확대 ('17.12.31까지)

4. 기대효과

- 중견기업은 기업 수에 비해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아 세제지원 확대 시 양질의 일자리 마련 가능
 - 중견기업 수는 3,846개로 전체대비 0.12%에 불과하나 총 고용인원은 116.1만명으로 전체일자리 9.7%를 차지

* 중견기업 근로자는 전년(106.6만명)대비 8.9% 증가, 전체 고용대비 비중도 '12년 9.5%에서 '13년 9.7%로 상승 (중소기업청, '2014 중견기업 통계')

- 특히, 우량 중견기업은 장래성 및 지속가능성도 높아 안정적인 고용 창출 가능 (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, 2014.11¹⁾)

1)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장병완 의원 대표발의: 10705) 검토보고, 2014.11

7.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1년만 한시적으로 중견기업까지 확대 → 일몰 연장

(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,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제2항, 제4항)

중견기업제 건의사항

- 일몰연장: '15.12.31까지 → '17.12.31까지

1. 현황

-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50% 감면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(단,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, 중견기업은 '15.1.1~'15.12.31까지만 한시적으로 감면)

2. 문제점

- 엔화약세가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재 수입 등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했는데* 엔화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1년간만 시행하는 것은 매우 부족

* 기획재정부,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('14.10.8)

- 지난해 정부는 제도를 확대하면서, 중견기업이 감면 받고 싶은 신규물품을 신청 받았는데 품목 중 80%가 일본에서 수입예정이고,
- 엔저를 설비투자 확대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재 수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* 세제상 인센티브 유지가 필요

* 2015년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최경환 부총리 모두발언 ('15.5.7)

- 또한, 자체 원천기술과 기업경쟁력 확보,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공장자동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나,

- 국내에 생산업체가 없거나 기업수요를 충족하는 기계가 국내에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중견기업이 다수
- 특히, 정부는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기존 39개→62개로 대폭 추가한 만큼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몰연장이 필요

3. 건의사항

- 일몰연장: '15.12.31까지 → '17.12.31까지

8. 최저한세 부담 완화

[조특법 제132조 제1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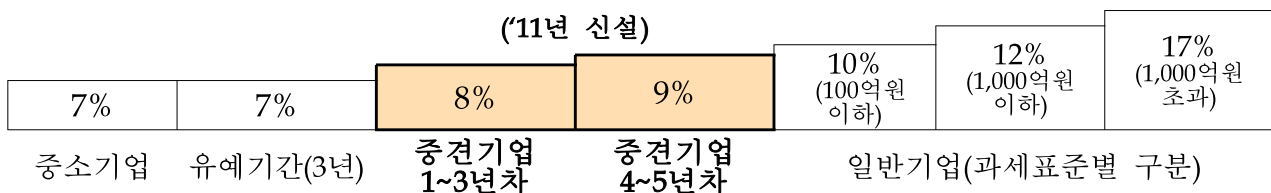
중견기업세 건의사항

- 최저한세 부담 완화: 중견기업(6년차 이상) 구간 마련

1. 현황

- 최저한세는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과 재정확보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기업규모별로 세율 차등

[그림 2] 최저한세 적용세율



2. 문제점

- 정부는 R&D, 설비투자, 가업승계 등 주요분야의 중견기업 조세특례를 확대하고 세법의 기업분류를 대·중소 → 대·중견·중소로 개편을 추진

* 2014년 세법개정: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까지 확대, 생산성 향상 시설·안전설비 투자시설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,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중견기업까지 확대 등

- 그러나, 제도확대에 따라 공제감면액이 많아지더라도 최저한세로 인해 이월공제만 쌓이고 있어 '중견기업 성장걸림돌 제거'라는 세제개편 취지가 약화

*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 배제되는 세액처리: 다음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

이월하여 공제,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중복되는 경우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

- 특히,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경우,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나 일반기업은(중견·대기업) 최저한세를 적용
- 이월공제가 허용되더라도 과세소득 부족으로 실질적인 조세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

중견기업 B사 사례

조세특례제한법에 중견기업 구간을 만들어도 최저한세를 적용받게 되면 이월공제만 늘어나게 됩니다. 법인세가 약 30억원 정도인데 절반이상을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했습니다.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약 2배정도 세부담이 증가했습니다.

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견기업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데(설비투자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)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를 적용받게 되어서 기업으로서는 더욱 어렵습니다.

-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한 세액공제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최저한세에 중견기업 6년차 이상 구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3. 건의사항

- 최저한세율에 중견기업(6년차 이상)구간 마련

9. 기업소득환류세제 중견기업에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해야

(법인세법 제56조, 동법시행령 제93조)

중견기업계 건의사항

중견기업과 대기업 과세기준을 차등화

1. 현황

- 중견기업 평균 환류세 12.9억원, 법인세의 23%에 해당

자기자본(자산-부채) 500억원 초과 중견기업(과세적용대상) 1,401개사 중 제조업 이면서 외감기업이고 '13년 당기순이익 기준 흑자기업인 363개사를 분석

-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중견기업(과세적용대상)의 61.7%가 환류세를 부담, 총 환류세액은 2,897.8억원, 기업당 평균은 12.9억원²⁾으로 예상 (투자포함방식기준, 중견련 자체분석)
- 이는 분석기업 평균 당기순이익(216.6억원)의 6.0%, 평균 법인세액(56.1억원)의 23.0%에 해당
- 중견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17.7%인데, 환류세에 따른 상승폭은 2.5%p³⁾로 실효세율이 20.2%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
- 특히,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중도 중소기업(0.36%), 중견(1.27%), 대기업(1.08%)으로 중견기업이 가장 높는데* 환류세 도입으로 인해 중견기업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

* 중소기업청, '2014년 중견기업 통계'

2)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균 1,300만원, 한국재정학회 재정책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평균 11억원, CEO스코어(경영성과 평가사이트)는 10대 그룹이 1조 1,016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하는 등 분석기관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타남

3) 계산식: (법인세액+환류세액*17.7%(실효세율))/법인세액

2. 업계의견

□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과세기준을 차등화해야

- '13년 말 기준 일반 중견기업 2,853개사(관계제외) 중 자기자본(자산-부채) 500억원 초과 기업은 49.1%인 1,401개사
 - 전체 중견기업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
 - 매출액 1~2천억원 기업 57.5%, 2~3천억원 기업 66.7%가 대상이 되는 등 중견기업 대다수가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

<표 4> 매출액 분포별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일반 중견기업

(단위: 개사, %)

구분	1천억원 미만	1천억원~2천억원	2천억원~3천억원	3천억원~5천억원	5천억원~1조원	1조원 이상	합계
전체	1,320	593	396	272	192	80	2,853
자기자본 500억원 초과	351 (26.6)	341 (57.5)	264 (66.7)	210 (77.2)	163 (84.9)	72 (90.0)	1,401 (49.1)

주: 자기자본관련 재무정보가 없는 90개사는 분석에서 제외
 ()은 매출액 구간별 전체기업 대비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 비중
 자료: 중소기업청, '2014년 중견기업 통계'

-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기업소득환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기업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 될 우려
 - 국회예산정책처⁴⁾에 의하면 중견기업 443개사(전체 1,481개사 대비 29.9%), 대기업 202개사(전체 1,266개사 대비 15.9%)가 환류세 부담 예상. 즉, 제도시행시 중견기업의 과세비중이 대기업보다 클 우려
 - 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토론회에서도 자산규모가 큰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, 자산에 대한 역진성을 지적

4) 국회예산정책처, '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', 2014.10

<표 5> 자산규모별 환류세부담 집중도

(단위: %)

자 산	자산비중	세수비중
상위 25% 이상	83.70	69.45
50% 이상	8.78	14.80
75% 이상	4.72	8.08
75% 이하	2.80	7.66
합 계	100.00	100.00

주: 투자포함방식(70%) 또는 투자제외방식(30%)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'2014 조세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(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문)', 2014.12

- 대기업과의 동일한 과세기준율로 인해 지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과세형평성을 저해
-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도입취지와 달리 2014년 신고인원의 절반 이상인 53.3%가 중견기업으로 중소 40.6%, 상호출자 6.0%보다 월등히 많았음 (국세청, 2014.8 보도자료)

3. 건의사항

- 중견기업과 대기업 과세기준율을 차등화

10. 지방소득세 세액·감면대상 법인까지 확대 외

[지방세특례법, 지방세기본법 제110조]

중견기업제 건의사항

- 주요세액공제·감면대상 개인사업자 → 법인까지 확대
-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 지양

1. 현황

- 종전까지 법인세액의 10%로 납부하였으나, '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, 세액공제·감면 등을 적용한 세액을 납부

$$\begin{array}{c}
 \boxed{\text{과세표준}} \times \boxed{\text{법인지방소득세 세율}} \ominus \boxed{\text{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}} \ominus \boxed{\text{법인지방소득세 공제 감면*}} \ominus \boxed{\text{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()}} \\
 \text{<법인세와 동일>} \qquad \qquad \qquad \text{<지방소득세 산출>}
 \end{array}$$

- 기존 '조세특례제한법'상 공제·감면 규정을 '지방세특례제한법'으로 이관하면서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을 일괄폐지하고 개인지방소득세에 한해서만 특례를 적용

* 개인지방소득세만 공제감면대상: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, 생산성향상시설·안전설비투자 시설 세액공제,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,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

2. 업계의견

① 주요세액공제·감면대상을 법인까지 확대 필요

- 지방소득세 세정당국이 국세청에서 226개 지자체로 변경되면서 법인소득분에 대해서 세액공제·감면을 배제, 연간 9,500억원에 기업 추가부담이 예상*

* ‘지역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’, 전경련,중앙회, 중견련 공동건의, 2014.4

- 중소·중견기업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연구개발, 시설투자, 인력채용은 필수인데, 이에 대한 지원이 일시에 사라지게 되어 기업으로서는 부담 증대
- 특히, 기업규모가 비슷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동일한 투자 건에 대해 차별이 생기는 문제도 발생
- 기존에는 지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했으나, 올해부터 재무상태표, 포괄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사업장·지사가 있는 지자체마다 제출해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까지 증가
- 기업의 담세력과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, 고용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재설계가 필요

② 동시다발적인 지자체 세무조사 우려

- 지방정부는 지방법인세 과세권을 부여받게 되면서 국세와는 별도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부담 우려
- 이는 해당기업이 전국 50곳에 사업장, 지사를 보유했다면 50개의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,
-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이 개정된 탓에 대부분 기업이 지방세법 개정사실* 및 포괄적인 세무조사까지 지자체에 부여되는 점을 나중엔 인지하여 혼란 가중

* 지방세법 개정 인지도: 지방세법 개정사실 모름(49.6%), 개정법 통과직전/직후 인지(41.8%), 개정 논의과정 중 인지(3.7%), 전경련 ‘지방세법 개정 관련 기업 애로조사’ 268개사 응답. 2014.5

- 이에 정부는 기업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고,(15.3.17,행자부)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

겠다고 함('15.4.21, 국회 기재위 회의)

- 그러나, 지방세기본법 제110조에 따라 지자체는 언제든지 징수권을 강화할 수 있어 기업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
- 특히, 중견기업은 대기업만큼 각 지자체를 개별적으로 응대할 인력·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면 정상적인 경영 불가

3. 건의사항

- 주요세액공제·감면대상을 법인까지 확대
- 동시다발적인 정부와 지자체 세무조사 지양